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Online Series

2017. 04. 12. | CO 17-09

신종호 (국제전략연구실장)

2017년 4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칭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었다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북핵 및 사드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은 정상회담 직후 관례적으로 진행했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을 생략함으로써 양국이 무역-통상 및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관심 사항인 북핵 해법 도출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하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한하는 등 주변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중 정상회담 평가: 전략적 탐색과 견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향후 양국관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적 탐색과 견제가 회담의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미국 우선(America First)’에 기반하여 미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미국 내 경제상황과 지지율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방점을 두고 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역시 2017년 말 예정된 19차 당 대회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보다 중국이 가진 경제적 이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민감한 외교안보적 사안은 갈등을 회피하고자 했다.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100일 계획'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미중 양국이 상호 전략적 소통을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 체제를 외교, 경제, 법 집행사이버 안보, 사회·인문 등 4개 분야의 고위급 대화 기제로 재편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역시 미중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미중 양국 모두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전면적인 무역·통상 갈등이나 우발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중이 북핵 및 사드 관련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강대국(G2)의 관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여전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중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공감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수준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패키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즉, 미국은 여전히 '중국역할론' 및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조하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는 준수하겠지만 '대화과 협상'을 병행하는 입장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북핵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미중의 셈법에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미중의 대외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과 위상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상회담 직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미중 간 협력이 어려워지면 미국이 독자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곧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미중 간 '전략적 불신'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의도와 셈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합의: 강대국관계의 부정적 영향 차단 필요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바로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관계의 하부 구조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곧 북핵문제가 미중 간 동아시아 ‘대리 세력경쟁’의 도구로 이용되어 미중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핵 해법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양국 정상회담의 만찬 도중 발생한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미중관계 추세와 미국 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러한 강경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역할론’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북한 핵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한미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 등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재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화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관련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시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확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향후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첫째, 북핵문제의 원인과 해법과 관련하여 ‘북한책임론’, ‘중국책임론’, ‘미국책임론’ 등을 뛰어넘어 ‘국제사회 공동책임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고 북한 비핵화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이 제시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론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방안(Korea Solution)’을 고안하여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방안’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 북핵·북한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한반도의 생존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한반도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흐를수록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공식적인 정책결정라인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정책결정그룹 및 이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들과의 정책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북한 부담론’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발언권과 입지를 확대할 수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핵이 중국의 국내경제 및 대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나아가 한중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